

 금융위원회	<b>보도 반박</b>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<b>배포</b>	'21.9.10.(금)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이 한 진(02-2100-2970)		<b>담 당 자</b>	정 태 호 사무관 (02-2100-2971)	

## **제 목 : 전자금융거래법 등 디지털 금융정책을 전면 재검토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**

### **1. 기사 내용**

- 헤럴드 경제는 9.10일자 “고승범號 ‘금융혁신-소비자권리’ 균형 잡는다” 제하의 기사에서
  - “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디지털 금융정책 재검토에 나섰다. 혁신보단 안정에 방점을 둔 행보다”... “기존에 추진해왔던 ..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등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차원이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# **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**

- 금융위원회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등 금융혁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  - 금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직후 금융위원장이 밝힌 바대로, 핀테크 육성 등 금융위가 그간 추진해온 금융혁신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.
- 우리 경제·금융이 디지털 전환되는 과정에서 핀테크 육성을 비롯한 ‘금융혁신’은 ‘이용자보호 및 금융안정’과 함께 추구해야 나가야 하는 정책적 가치로서,
  -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혁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 ☞ 개정안 주요내용은 [별첨] 참고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  
할 경우 출처를 표기  
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

□ 혁신적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하면서, 이용자 보호·금융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

① (금융혁신) 이용자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타트업에게 금융권 진출의 '기회의 사다리' 마련

- ① **지급지시전달업(MyPayment)** : 직접 고객자금을 보관하지 않고 이용자의 결제·송금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하는 업종 신설  
 ⇨ 소규모 핀테크·스타트업 등도 소자본으로 금융산업 진입 가능(Small License)
- ② **종합지급결제사업자** : 핀테크, 신용카드사 등이 이용자에게 직접 계좌를 발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한 원스톱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  
 ⇨ 하나의 금융플랫폼을 통해 기존의 간편결제·송금 외에도 급여이체, 카드대금·보험료납부 등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One-Stop으로 제공
- ③ **소액후불결제** :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주부·사회초년생도 이용 가능(30만원 한도)

② (이용자보호) 디지털금융 확대에 상응하여 금융회사·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정비

- ① **이용자에탁금(선불충전금) 보호** : 이용자 재산보호 3중세트(외부예치, 우선변제권, 외부청산 의무화)를 통해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이용자피해 가능성 차단
- ② **영업행위 규율** : 금융상품을 광고·비교추천하는 등의 금융플랫폼 등에 대하여 공정성·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·사업자 피해를 예방
- ③ **배상책임 확대** : 현재 접근매체 위·변조, 해킹 등 기술적 사고로 한정된 책임을 '이용자가 허용·지시하지 않은 비대면거래'(무권한거래) 전반으로 확대

③ (금융안정) 클라우드 등 제3자 리스크(Third party risk), 해킹·전산장애 등 디지털 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

- ① **금융보안** :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확대됨에 따른 IT리스크 관리체계 확립
- ② **제3자 리스크** :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(구글, 아마존, IBM, 네이버 등)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수탁자에 대해서도 유사시 직접 감독